

# 李대통령 “지금이 선진국 따라잡을 기회”

### 20일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제...위기 극복 강조

###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서열 바뀌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진국을 따라가 기 힘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서열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에도 보면 위기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위기가 지나면 위축되고 오히려 위기 때 적극적, 공세적 입장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기업과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상 기구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제, 금융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

한 민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위기에 언급, “어떤 설명이 필요 없지만 세계 금융환경 속에서 한국 위기는 쉽지 않다”며 “당면한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 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자문을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몇 안 되는 기구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최소한 월 1회 정기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 회의가 분과별로 나눠 실질적인 토론회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직접 논의하는 식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며 “효과적인 자문기구 가 돼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기환 서울 과이낸스 포럼 회장을 부의장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2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위촉된 새 정부 제1기 민간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증현 전금융감독위원장, 최중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석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과거 정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파적 이해를 넘은 경제 살리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들도 흔쾌히 승낙했다”면서 “참여정부, DJ정부, YS정부 인사들과 함께 노·장·정 인사들이 고루 포함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회의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끄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 홍준표 대표-이석연 법제처장 ‘직불금’ 처벌 공방

### 洪 “법 해석 오락가락...법제처장이 판사냐”

### 李 “농지법상 처벌 가능...공개 토론해 보자”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처벌 기준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석연 처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쌀소득보전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경작확인서를 신청했다면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처장은 지난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유권해석) 할 때에도 법해석이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한 뒤 “법제처장은 법해석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 아니라 검사 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처장이 농지법 규정과 쌀직불금지급 규정을 아마 착각한 것 같다”며 “농지법 규정상 농지소유자와 쌀소득보전법상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법적 차이가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 처장은 농지법 규정만 본 것이고 쌀소득보전법을 만들 때에는 농지규정과 달리 만들었다”며 “그래서 쌀소득보전법 제정 당시 잘못 만들었다고 정치권에서 전

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와관련,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 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사안”이라며 “쌀직불금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실수이고,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이어 “법제처장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령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답변하는 것은 원권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기관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자꾸 법제처를 비하하고 위헌여부에 대해 법제처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하는데 법제처의 주요 업무가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오락가락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다”며 “법제처장이 법리에 따라서 말하는데 왜 신중해야 하냐고 지적하느냐”고 반문한 뒤 “정치적 유행리에 따라 인신공격을 하거나 법제처 업무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7명중 기업인·금융계 인사 10명 포진

### ■ MB 정부 경제자문회의의 면면 살펴보니

### 전문 계층 속 한덕수 前 총리 포함 ‘눈길’

이명박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이 100% 바뀐 가운데 기업인 과 전직 관료가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제1기 위원들은 모두 27명이다. 부의장은 학자 출신으로 관계를 포함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김기환 서울과이낸스포럼 회장이 맡았다.

전원이 물갈이된 가운데 기업인 과 금융계 등 업계 인사가 10명 안팎으로 참여정부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이장규 하이진로그룹 부회장, 윤경희 ABN암로증권 회장,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 최명주 GK파트너스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기업인은 별로 없었고 상공회의소 회장,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 등이 포진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졌다.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이 많아진 점도 눈에 띈다.

전직 경제관료 출신도 많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장 고문인 유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태평양 고문인 이석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최중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김홍경 사장이나 정지택 부회장도 관료 출신이다.

이석재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 전 총리와 윤 전 위원장 등은 참여정부 시절에 최고위직까지 올랐다. 다음은 민간 자문위원 명단.

▲김기환(부의장) 서울과이낸스포럼 회장 ▲강은희 위니텍 대표이사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 ▲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 ▲박원암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오규택 한국채권연구원장 ▲윤경희 ABN암로증권 회장 ▲윤덕룡 KIEP선임연구위원 ▲윤증현 김&장 고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석재 태평양 고문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 ▲이장규 하이진로그룹 부회장 ▲이효수 영남대 경제학부 교수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최명주 KDI선임연구위원 ▲최명주 GK파트너스 사장 ▲최중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 DJ, 26일 中 선양 방문

### ‘동북아 협력 포럼’ 참석 기조연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26~29일 3박4일 일정으로 국제포럼 참석차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를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은 27일 중국인민외교화와 라오닝성 정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선양시가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발전과 협력포럼’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최경환 비서관이 20일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갖고 동북아 국가간 협력,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 전망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 기간 북한 신의주 접경지역인 단동도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04년 6월 중국인민외교화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후 4년여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수행한다. /연합뉴스



## 현안 꺾는 ‘송곳 질의’ 정치권 주목

### 국감 인물

### 농림수산물 김영록 의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이 초선답지 않게 연일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내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현안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피감 기관들의 진땀을 흘리게 하면서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의 민주당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 6일 농림수산물 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 배 생산 농민과 양식 어업인의 눈물을 정부가 닦아줘야 한다”고 질타. 정부로부터 추가 구매 방침을 얻어냈다.

또,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03

년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로 무려 1천77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 농협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13일 수확에 대한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가운데 무려 35%가 수입수산물”이라고 지적, 수협측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을 최소한으로 수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여기에 20일 진행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유통공사가 지난 2005년 이후 해외박람회 참가업체에 159억원을 지원했으나 무려 154개 업체의 수출 계약이 전 무하다”고 질타, 관계자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무인승합 중형

패키지

- 1,190,000
- 1,290,000
- 1,390,000
- 1,490,000
- 1,590,000

자유여행

- 1,290,000
- 1,390,000
- 1,490,000
- 1,590,000

### 제주 가을여행

- 119,000
- 139,000
- 159,000
- 179,000
- 199,000

### 등산/캠핑/장터/여행

- 1,190,000
- 1,290,000
- 1,390,000
- 1,490,000
- 1,590,000

### 무인승합 중형

패키지

- 1,190,000
- 1,290,000
- 1,390,000
- 1,490,000
- 1,590,000

자유여행

- 1,290,000
- 1,390,000
- 1,490,000
- 1,590,000

### 인천출발패키지

- 1,190,000
- 1,290,000
- 1,390,000
- 1,490,000
- 1,590,000